

한일 정상회담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호소카와 일본수상의 방한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에게 1.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인 지배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 약속을 명백히 할 것, 3. 전쟁범죄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법 준수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호소카와 수상이 경주에서 한 발언을 사죄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전쟁 인정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한일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호소카와 수상이 '2차대전은 침략전쟁이며 잘못된 전쟁'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뭔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크게 발전된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실망과 개탄의 심정을 가지게 된다. 한국정부는 한일 과거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가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역사의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표명해왔다.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정부가 적어도 진상규명만은 철저하게 요구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런데 도대체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정부가 한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이 '미래 지향' 운운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어물쩡 넘기려는 음모를 발견한다. 과거에 일어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50년 만에 역사의 전면에 부상된 것은 양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진실은 은폐되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때문이며, 그 진실을 존중하는 민중의 힘에 의해 가능했다. 한일 양 정부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여전히 외면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개혁과 미래지향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1993년 11월 7일